

## 소득과 투표참여의 불평등: 한국 사례 연구, 2003-2014\*

권혁용\*\*

한서빈\*\*\*

---

이 논문은 2003-2014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 선거에서 투표참여의 소득 격차가 발견되는지, 그리고 소득불평등과 투표의 소득 격차가 어떠한 패턴을 보이는지를 통시적 시각에서 고찰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한국 선거에서 투표 참여의 소득 격차(income bias in voting)가 뚜렷하게 발견되었다. 중산층에 비해 저소득층은 투표할 확률이 낮고, 고소득층은 투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탐색적 자료 분석을 한 결과, 소득불평등과 투표참여의 소득 격차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갈등이론보다는 상대적 권력이론에 조응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즉, 소득불평등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정치적 자원을 갖는 고소득층의 목소리가 더 활성화되고, 적은 정치적 자원을 가진 저소득층은 정치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스스로 기권하는 현상이 발견되는 것이다. 이 분석 결과는 한국의 투표장에서 고소득층이 과다대표되고 저소득층은 과소대표되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정치적 불평등의 완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첫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

주제어: 선거, 투표참여, 투표율, 소득, 불평등, 한국정치

---

\* 날카롭고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세 분의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이 연구는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7S1A3A2066657).

\*\* 교신저자, 미국 코넬(Cornell)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비교정치, 정치경제, 불평등과 복지국가 등이다 (hkwon@korea.ac.kr).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비교정치경제, 정치학방법론 등이다(sbhan94@gmail.com).

## I. 서론

한국 선거에서 소득은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가? 많은 나라들에서 발견되는 투표참여의 소득격차(income bias in voting) 현상이 한국에서도 발견되는가? 소득불평등과 투표의 소득격차는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가? 투표의 소득격차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서 더 투표불참을 많이 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투표참여를 더 많이 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이러한 현상은 선출직 대표들이 저소득층의 요구와 이익에 반응하지 않는 대신에 고소득층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불평등한 반응성’(unequal responsiveness)과 연결되어 있다(이현경·권혁용 2016; Bartels 2008; Gilens 2012). 투표의 소득격차와 선출직 대표들의 불평등한 반응성이 결합되어 불평등한 민주주의(unequal democracy)로 이끌게 된다. 소득불평등과 정치적 불평등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물론 두 가지 불평등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더 체계적인 이론 수립과 인과추론을 가능케 하는 연구디자인과 결합된 경험적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소득불평등이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동시에 소득불평등이 정당의 선거 전략과 정부의 정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데, 소득에 따른 정치적 반응성의 불평등이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여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어렵게 한다. 하나의 순환 고리를 이루는 것이다(Bonica et al. 2013). 이러한 점에서, 한국에서 투표참여의 소득격차를 분석하고 소득불평등과 투표참여의 소득 격차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소득과 투표참여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투표할 확률이 높고 저소득층은 투표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주로 미국정치 연구에서 이러한 투표의 소득격차가 발견되며,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에서도, 그 정도는 미국에 비해 미약하지만, 소득에 따른 투표참여의 격차가 발견되었다(Franklin 2004; Leighley & Nagler 2014; Wattenberg 2002). 투표의 소득격차 현상은 규범적으로 민주주의의 작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어왔다. 다시 말해서,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서 투표장에서 훨씬 과다대표(overrepresentation)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평등에 바탕한 민주주의의 원리에 어긋나는 현상이라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런데,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투표의 소득격차 현상이 소득불평등이 증가해 온 1980년대 이후에 그 이전 시기보다 더 심화되었는가 라는 점이다. Leighley & Nagler(2014)는 미국에서 1972년에 나타난 투표의 소득격차 정도와 2008년의 격차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은 놀랍게도 1970년대 중반 이후에 비약적으로 증가한 미국의 소득불평등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이다. 반면에, Freeman(2004)은 1970년대에 비해서 1990년대 말 미국 선거에서 투표참여의 소득격차가 훨씬 심화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선거정치 연구에서 통시적으로 소득에 따른 투표참여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는지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 것에 반해서, 한국의 투표참여 연구에서 투표 참여의 소득격차에 관한 연구는, 우리가 알기에, 거의 전무하다. 한편으로는, 소득보다는 지역, 세대, 이념에 따라 투표참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경향이 강했다(강원택 2010; 이갑운 2008). 또한 선거경합도와 정치적 이념 성향 등 선거국면적 변수나 정치적 요인으로 투표참여를 설명하는 연구를 많이 진행하였다(윤성호·주만수 2010; 조성대 2006; 한정훈·강현구 2009; 황아란 2008). 다른 한편으로, 소득과 투표참여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도 대부분 일시적인 횡단면 자료 분석에 머물러 온 것이 사실이다(서복경 2010; 서현진 2009). 이렇듯 기존 연구들이 횡단면 자료 분석이라는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선거에서 통시적으로 투표의 소득격차 현상이 발견되는지, 그리고 시기적으로 어떠한 추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밝혀내지 못했다.

이 논문은 첫째, 한국 선거에서 소득과 투표참여의 상관관계가 발견되는지, 둘째, 투표참여의 소득격차 현상이 통시적으로 어떠한 추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셋째, 소득 불평등과 투표 참여의 소득격차가 어떠한 패턴을 나타내는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4〉 자료를 분석한다. 우리의 분석 결과는 2003-2014년 시기 동안 한국사회에서 투표참여의 소득격차를 발견하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소득이 높을수록 투표할 확률이 높게 분석되었다. 우리의 분석은 또한 투표의 소득격차가 투표율이 낮은 선거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제시한다. 이 연구의 분석은 또한 소득불평등과 투표참여의 소득격차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발견하였다. 소득불평등 수준이 높을 때 투표참여의 소득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은 한국 선거에서 투표참여의 불평등이 발견되며, 투표장에서 고소득층이 과대표되고 저소득층이 과소대표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 논문의 학문적 기여는 우선 한국 선거연구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투표참여의 소득격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한국 선거에서 소득이 투표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정치경제적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두 번째로, 이 연구는 한국 선거정치 연구에서 투표참여의 소득 격차를 통시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2003-2014년 시간의 흐름에서 지난 12년 동안

소득과 투표참여의 관계가 어떠한 추이를 보이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연구의 기여가 있다. 셋째, 이 연구는 비록 추론적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투표참여의 소득격차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소득불평등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정치적 불평등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의 투표장에서 고소득층이 과다대표되고 저소득층은 과소대표되는 현상을 제시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정치적 불평등의 완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첫 문제제기가 될 수 있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다음 절에서는 소득과 투표참여에 관한 정치학적 논의들을 간략히 소개한다. 3절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자료와 변수들에 대해 소개하고, 4절에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소득불평등과 투표참여의 소득 격차의 패턴을 탐색적 자료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5절은 결론과 함께 정치학적 함의를 제시한다.

## II. 투표참여의 정치학: 이론적 논의

### 1. 소득과 투표참여

투표참여에 관한 논의는 비용-이득 분석(cost-benefit analysis) 이론틀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Downs(1957)의 모델은 상대적 비용과 이득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반영한 것이다. 즉, 투표를 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비용을 초과할 때 사람들은 투표한다는 것이다. Downs(1957)는 네 가지 변수가 투표의 이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했다(p.274). 첫째, 정당이 제시하는 정책의 차이에 대한 인식, 둘째, 선거가 얼마나 박빙 경합인가, 셋째, 투표행위 자체의 가치, 그리고 넷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투표참여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교과서적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Enelow & Hinich 1984; Mueller 2003).

$$\text{Vote if and only if } PB - C + D > 0$$

여기에서 P는 어느 한 투표자의 표가 당선자를 결정지을 확률, B는 선호하는 정당/후보자가 당선될 때 얻게 되는 심리적, 물질적 효용, C는 투표에 드는 정보취합 비용 및 기회비용, 그리고 D는 투표 자체로부터 얻게 되는 효용을 가리킨다. 이 수식을 위

에 제시한 Downs의 네 가지 요인들과 견주어 살펴보면, 정당 정책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B의 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선거경합도에 대한 인식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P에 대한 인식(결정적인 표가 될 것이라는 인식)에 미칠 것이다. 투표행위 자체의 가치에 대한 투표자의 인식이 D에 영향을 미친다.

이 논의를 더 부연하여 설명하자면, 유권자들은 경쟁하는 정당들의 정책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날수록 B의 값이 커지고, 전체 유권자수가 작고 선거가 경합적이어서 유권자가 자신이 결정적 투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할수록 P의 값이 커지며, 그리고 정보취합비용과 기회비용이 작을수록 투표에 드는 비용(C)이 작아지고, 투표가 시민의 덕목이라는 규범과 투표함으로써 얻는 표현적 효용(expressive benefits)이 클수록 D가 커진다. 각각의 변수들이 투표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논문의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소득계층에 따라 이러한 변수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소득계층에 따라 위의 변수들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따라 투표참여의 확률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이다. Wolfinger & Rosenstone(1980)은 미국 선거의 투표참여에 대한 고전적인 연구에서 극빈층이 투표율을 낮추는 것은 사실이지만, 극빈층을 제외하고 나면 소득이 투표참여에 그리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p.26).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투표참여와 연관될 수 있는 다섯 가지 이유를 제시한 바 있다(pp.20-22). 첫째, 저소득층은 매일 매일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차적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둘째, 고소득층은 정치적 참여와 관심의 정도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직업을 갖는다. 셋째, 소득은 사회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친다. 고소득층은 시민적 덕목과 참여를 강조하는 규범과 사회적 네트워크에 연관될 가능성이 크다. 넷째, 고소득층은 정치적, 사회적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서 현재 시스템에 더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여기에서 지적할 점은, 유권자의 시각에서 투표참여의 결정요인을 논의할 때, 정당과 후보자의 전략적 행위, 그리고 선거국면에서 제시되는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며 정당들이 어떠한 정책공약을 제시하는가에 대한 위로부터의 접근(top-down approach)과 결합되어야 완전한 이론적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Aldrich(1993)는 합리적 행위로서 투표는 다른 집단행동의 논리와 달리 그렇게 큰 비용이 들거나 커다란 이득을 얻는 행위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투표참여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오히려 전략적인 정당 및 후보자들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당 및 후보자들의 정책의 차별성 여부와 캠페인을 통해 어느 계층집단의 투표를 더 독려하는가가 중요하다

는 것이다.

## 2. 소득불평등과 투표참여

소득불평등과 정치참여의 관계에 대하여 서로 대립되는 이론적 예측이 존재한다. 첫째, 갈등이론(conflict theory)이다. 불평등이 증가하면서 사회의 소득분포 구조에서 저소득층의 위치가 이전보다 더 뚜렷하게 부각되면서 불평등 이슈가 현저화(salient)되며, 이는 저소득층의 계층의식을 증진시키고 따라서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투표참여와 재분배 정책 요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Brady 2004). 소득불평등의 증가와 저소득층의 투표참여 증가가 맞물려 있다는 예측인데, 이에 대한 일반적인 경험적 증거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Solt 2010).

둘째, 상대적 권력이론(relative power theory)이다. 소득과 자산은 정치적 자원으로 이어진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소득불평등이 심한 맥락에서는 고소득층의 정치적 자원과 저소득층의 자원의 격차가 더 커지게 된다(Goodin & Dryzek 1980). 이러한 논의의 맥락에 따르면, 소득불평등의 증가는 정치참여의 소득 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고소득층의 견해와 담론이 공론영역에서 더 힘을 발휘하면서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이 전파하는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는 적응을 보이게 된다(Gaventa 1980). Huber & Stephens(2012)는 상대적 권력이론의 이론적 예측을 사회학, 정치학, 그리고 인류학에서 흔히 가정하는, “사회구조는 스스로 재생산한다’는 가정에 부합한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p.37).

그런데, 이러한 두 이론은 정치과정에서의 갈등과 투표참여를 각 집단이 갖고 있는 자원(resource)으로 설명하는데(Brady et al. 1995), Beramendi & Anderson(2008)이 지적하듯이, 투표참여를 자원뿐만 아니라 인센티브의 차이로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자원과 인센티브는 분석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긴밀히 맞물려 있기도 하다. 소득불평등의 증가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투표참여의 인센티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투표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때, 소득불평등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선거경쟁에 참여하는 정당들이 어떤 정책을 제시하는가에 의해 조건지어질 것이다. 정당이 제시하는 정책이 유권자들이 투표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B값(선호하는 정당의 승리로 부터 얻게 되는 효용)의 크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소득불평등과 투표참여의 관계와 관련하여, Leighley & Nagler(2014: 8~9)는 다음의 두 가지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첫째,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재분배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이 하나 존재할 경우, 저소득층은 두 정당 모두 재분배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정치적 소외를 덜 느끼게 된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이 증가하고 재분배정책이 현저한 선거이슈로 등장할 때 하나의 정당이 재분배정책을 제시하고 선거경쟁이 뛰어들다면, 저소득층은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재분배 이슈의 현저성은 고소득층에게도 투표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고소득층의 투표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 경우, 종합적 효과는 저소득층의 투표율이 이미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 투표하는 저소득층 유권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미 투표참여가 높았던 고소득층의 증가에 비해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투표의 소득격차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둘째, 경쟁하는 어느 정당도 재분배 정책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저소득층은 소득 불평등이 증가한 상황에서 더 정치적 소외를 느끼게 될 것이고 투표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이는 고소득층에 비해 낮은 투표율을 보이면서, 이러한 경우 투표참여의 소득격차는 더 높아질 것이다. 두 시나리오 모두 전제하는 것은, 정당의 정책으로부터 도출되는 효용이 유권자들에게 투표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다.

### 3. 한국의 선거와 투표참여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경제적 요인과 투표참여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밝혀왔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대체로 시간이나 정치 정보수준 등 정치참여를 쉽게 만드는 자원이 풍부하다는 메커니즘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한국 선거연구에서 제시된 바에 따르면, 연령과 투표참여의 관계는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소득과 투표참여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김성연 2015; 서복경 2010; 서현진 2009). 서현진(2009)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투표불참의 확률이 높으며, 소득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반면에, 서복경(2010)은 같은 선거들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투표참여의 확률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마찬가지로 김성연(2015)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자료에 대한 분석에서 투표참여 집단과 불참 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비교한 연구에서 소득의 차이가 뚜렷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투표참여 추정 모델의 차이나, 모델 설정(specification)의 차이가 소득과 투표참여에 관한 상반된 연구

결과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 그런데 기존 연구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횡단면 연구 디자인에 바탕한 분석이라는 것이다. 통시적으로 한국 선거에서 소득과 투표참여의 관계가 어떠한 특성과 추이를 보이는지, 그리고 투표참여의 소득격차가 존재한다면, 소득불평등과 투표참여의 소득격차가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지에 관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연구가 최초의 시도라 할 수 있다.

### Ⅲ. 경험적 분석: 자료와 변수

이 연구는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2003-2014〉(김지범 외 2017) 자료를 활용한다.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4〉는 12년 기간 동안 매년 실시되었고, 다단계 임의추출 기법으로 추출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를 수행한 자료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종속변수는 투표참여이다. 문항은 “귀하는 지난 \_\_\_선거에서 투표하셨습니다가?” 투표했다고 응답한 경우 1, 투표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투표참여뿐만 아니라 이 분석에서 사용된 문항내용은 〈부록 표 A.3〉에 나타나 있다. 12년 기간 동안 두 차례의 대통령선거, 세 차례의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가 시행되었다(2004년 총선,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총선, 2012년 대선, 2014년 지방선거). 서베이 자료를 활용하여 투표참여를 분석하면서 다음의 두 가지 점을 지적할만하다. 첫째, 실제 투표율보다 여론조사 응답자들 중에 투표했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거의 항상 높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투표불참자들일수록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투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표했다고 응답할 인센티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desirability bias). 서베이 응답자중에 투표기권자들이 과소대표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과 투표에 불참했던 응답자들 중의 일부가 투표했다고 허위로 응답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왜곡이 서로 상쇄된다면 분석에 커다란 편향을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Lutz & Marsh 2007; 김성연 2015: 51에서 재인용). 그러나 동시에 한국 선거에서 위 두 측면이 얼마나 상쇄되는지에 대한 경험적 증거가 아직 연구된 바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둘째, 선거의 층위에 따라 투표참여 여부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김옥 2006). 예컨대, 대통령선거가 더 중요한 선거로 인식되고 지방선거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되면, 지방선거에서는 기권하고 대통령선거에서는 투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선거층위에

다른 투표참여/기권 여부가 소득계층에 따라 체계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믿을만한 설득력 있는 이론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 다만 투표하기 위한 정보취합 비용이 낮고 상대적으로 치열하게 선거캠페인이 집중적으로 전개되는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이 다른 선거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투표율의 증가와 이전까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저소득층이나 청년층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타나는 현상이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를 고려하면, 투표율이 높은 선거에서 투표참여의 소득격차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이 연구가 2000년대 이후 한국 선거에서 나타난 투표참여의 소득격차를 통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분석은 모든 층위의 선거에서 투표참여 여부를 분석한다.

투표참여의 소득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서 소득계층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한국경제활동인구조사> 등 대단위 조사가 정확한 소득측정에 더 적합한 자료이지만, 경찰조사에는 투표참여 여부를 묻는 문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투표참여 문항과 소득 문항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소득은 대체로 주어진 소득구간 중에서 응답자가 선택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가구소득 문항에 대한 응답의 정확성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있다. 모든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혹은 정확히 알려라도 축소보고(under-report)할 유인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측정치의 결여로 인해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의 소득 문항을 활용한다.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에 포함된 세전(pre-tax and pre-transfer) 가구소득을 묻는 문항은 22개의 소득구간으로 범주화되어 있다. 이 문항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 측정을 분석에 사용한다. 첫째, 22개의 소득구간을 저소득층-중산층-고소득층으로 구분한다. 저소득층은 0-3 구간, 중산층은 4-10 구간, 그리고 고소득층은 11-21의 구간이다. 저소득층은 149만원 이하, 중산층은 150만원-499만원, 고소득층은 500만원 이상 집단으로 구분된다. 세 소득집단을 다른 기준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한 경우에도, 아래에서 보고할 분석결과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결과를 발견하였다. 둘째, 전체 응답자들의 중위 응답구간인 7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이하(7 포함; 0-7) 집단과 중위소득 이상 집단(8-21)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이하와 이상을 구분하는 것은 Meltzer & Richard(1981) 모델에서 제시한 중위소득과 소득불평등, 그리고 정부의 크기에 대한 연구와 맞닿아 있다. Meltzer & Richard(1981)는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면서 중위소득이 평균소득보다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선거에서 결정적인 중위투표자(=중위소득)가 더 많은 재분배 정책을 요구하면서 재분배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론을 제시하였

다. 이러한 두 가지 소득집단 구분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투표참여와 소득의 관계를 분석한다.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독립변수들을 분석에 포함한다. 연령은 실제 나이로 측정된 것이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 선거 연구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투표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이갑운 2008). 연령이 높을수록 투표참여에 필요한 자원, 즉 정보취합 비용이 적게 들거나, 더 많은 유희시간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더 정치에 관심이 높은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연령이 높을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 분석은 19-65세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투표참여 모형을 추정한다. 분석의 초점이 소득과 투표참여의 관계이기 때문에 경제활동 가능 인구를 대상으로 제한한 것이다. 분석결과의 강건성 검증을 위해 65세 이상 응답자도 포함한 분석결과도 다음 절에 보고한다. 성별(남성=1)을 분석에 포함한다. 한국 선거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투표참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뚜렷하게 어느 한 성이,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투표할 확률이 다른 성에 비해서 높다는 이론적, 경험적 발견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교육수준(1-7 구간 범주)을 분석에 포함시킨다. 미국 등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투표참여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투표참여의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어 왔다(Verba et al. 1995; Wolfinger & Rosenstone 1980). 교육은 개인의 인지적 숙련도, 정치로부터 얻게 되는 이득, 그리고 사회적 기술을 증가시켜서 투표참여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한국 선거 연구에서 교육수준과 투표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증거는 혼재되어 있다. 서현진(2009)의 연구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권할 확률이 높다고 밝힌 반면에, 다른 연구에서는 교육수준과 투표의 양(+)의 상관관계를 제시하였다(강원택 2010). 미국 선거 연구에서 흥미로운 논의 중에는 자기선택(self-selection) 메커니즘을 강조한 연구들이 있다(Kam & Palmer 2008; Mayer 2011). 즉, 개인이 갖는 어떤 제3의 특징이 더 교육에 투자하여 높은 교육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동시에 투표에 참여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투표를 열심히 할 특성을 갖는 사람이 동시에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경제활동 변수를 분석에 포함시킨다. 현재 수입이 있는 일을 하는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한다. 노동조합원인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 0으로 코딩한다. 노동조합이 교육과 공동체 형성을 통해 노동조합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바탕해서 정책선호를 형성하고 정치참여를 독려하는 계몽효과(enlightenment effect)가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원일수록 투표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선거 국면에 따라 투표율에 차이가 발생한다. 더 치열하게 경쟁하는 박빙의 선거일수록 투표할 인센티브가 증가한다. 또는 특정 선거에서 경제위기 등 외부적 충격이나 스캔들 등의 국면적 변수 때문에 투표참여의 확률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포착하기 위해서 연도 더미변수를 분석모형에 포함시켜서 연도별 고정효과(fixed effects)를 고려한다.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변수들이 있다. 예컨대, 정치관심이 높을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투표할 확률이 높을 것이다. 정치효능감(political efficacy)이 높을수록 투표할 확률이 높다. 즉,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일반 국민의 의견이 정치권에 잘 반영되어 정책으로 산출된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민주적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투표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또한 선거경쟁에 참여하는 정당들의 정책의 차이가 뚜렷하다고 느껴지거나, 아니면 가장 선호하는 정당의 정책입장과 본인의 정책입장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투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러한 정치적 변수를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에서 위의 정치적 변수들은 매우 간헐적으로 문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2003-2014년 시기 동안 소득과 투표참여의 관계에 대한 통시적 분석을 하는데 주된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변수들을 포함시킬 경우, 특정 연도 조사 자료에 대한 횡단면적 분석에 그칠 수밖에 없다. 다만, 매년 조사에 포함된 다음의 두 가지 정치적 변수를 분석에 포함한다. 첫째, 응답자의 정치적 이념(1~5 척도)을 포함한다. 1은 매우 진보, 그리고 5는 매우 보수를 가리킨다. 둘째, 지지정당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항을 활용하여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무당파층을 1, 지지정당이 있는 경우 0으로 코딩한 더미변수를 분석에 포함시킨다. 무당파층일수록 기권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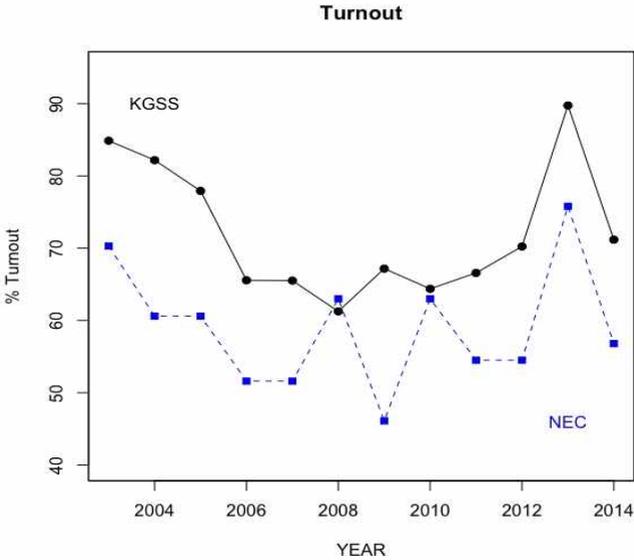
## IV. 경험적 분석 결과

### 1. 소득과 투표참여

한국 선거에서 소득과 투표참여는 어떤 특성과 추이를 보여주는가? 우선 2003-2014년 기간의 소득과 투표율의 특징과 추이를 탐색적으로 분석한 후에, 투표참여가 이항(dichotomous) 변수이기 때문에 투표참여의 결정요인에 대하여 2003-2014년 기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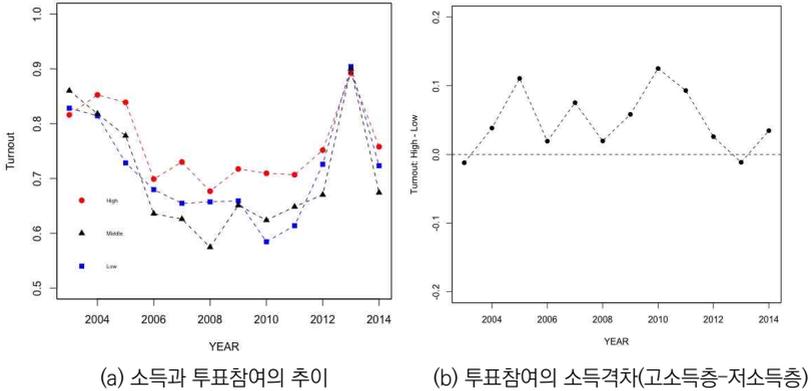
통합자료(pooled data)에 대한 로짓(logit) 분석을 수행한다.

〈그림 1〉 한국 선거의 투표율



〈그림 1〉은 2003-2014년 사이에 실시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의 투표율(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 자료)과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자료에서 투표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비율을 보여준다. 평균적으로 실제 투표율보다 한국종합사회조사 투표 응답이 약 15% 정도 높게 나타났다. 2008년과 2010년 자료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율은 2008년 국회의원 선거와 2010년 지방선거 투표율을 나타낸 것이고, 한국종합사회조사 투표율은 두 차례 모두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분포이기 때문에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다. 2004년 자료의 경우, 두 자료가 약 21% 포인트 차이를 나타낸다. 투표율의 차이가 발견되지만, 앞에서 언급한대로, 투표불참자가 여론조사에도 불참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왜곡과 실제 기권자가 조사에서 투표했다고 응답함으로써 발생하는 왜곡이 서로 대체로 상쇄효과를 갖는다면, 분석에 커다란 편의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림 2〉 소득계층과 투표참여의 추이, 2003-2014



(a) 소득과 투표참여의 추이

(b) 투표참여의 소득격차(고소득층-저소득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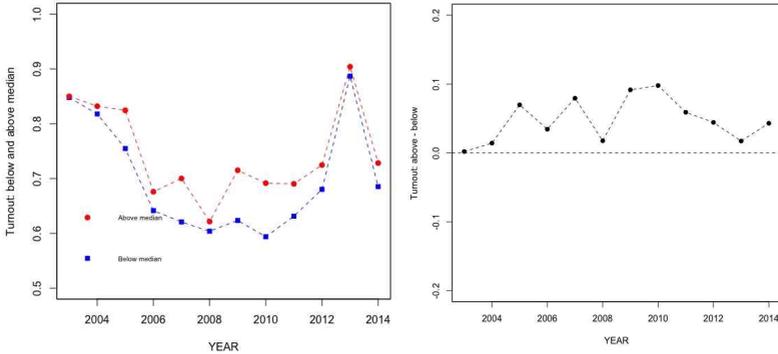
〈그림 2〉는 소득계층과 투표참여의 소득격차를 보여준다. 2003-2014년 기간 동안,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서 투표참여를 더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패널 (a)를 보면, 원으로 표시된 고소득층의 투표참여 비율이 네모로 표시된 저소득층의 참여 비율에 비해서 2003년과 2013년을 제외한 다른 10년의 조사에서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2003-2005년에 비해 2006년부터 투표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기간에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투표참여 비율이 더 차이가 난다는 점이 흥미롭다. 소득에 따른 투표참여의 격차를 더 뚜렷하게 나타내는 것이 패널 (b)이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2003년과 2013년을 제외하고는 고소득층 투표참여에서 저소득층 투표참여를 뺀 차이는 모두 양수를 나타내었다. 2005년, 2010년, 2011년 조사에서 나타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투표참여의 격차는 10% 포인트 이상을 기록하였다.

언급해야 할 부분은, 전체 투표율이 낮게 나타날수록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투표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Kenworthy & Pontusson(2005)은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서 더 꾸준하게 투표하고, 저소득층의 투표참여는 정치적 동원화(mobilization)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전체 투표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투표장에 잘 나오지 않았던 저소득층의 참여가 증가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그림 2〉가 제시하는, 전체 투표율의 하락과 소득계층의 투표 격차가 나란히 함께 발견된다는 점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림 3〉은 소득계층을 중위소득 이하 집단과 중위소득 이상 집단으로 구분한 후에 두 집단의 투표율을 보여준다. 2003-2014년 기간에 중위소득 이상 집단의 투표

참여가 중위소득 이하 집단의 투표참여보다 항상 높았음을 알 수 있다. 패널 (b)는 중위소득 이상 집단과 이하 집단의 투표참여 격차가 분석 대상 기간 동안 항상 양수였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2009년과 2010년 조사에서는 두 집단의 투표참여 격차가 약 10% 포인트를 기록하였다.

〈그림 3〉 중위소득 이하와 이상 집단의 투표참여 추이, 2003-2014



(a) 중위소득 이하와 이상 집단의 투표를 추이

(b) 투표참여의 소득 격차

소득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로짓(logit)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1>은 2003-2014년 통합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들과 일부 정치적 변수들을 포함하고 매 연도별 고정효과를 고려한 변수들을 포함한 모형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우리의 예측대로 저소득층일수록 중산층(준거범주)에 비해 투표할 확률이 낮으며, 고소득층은 중산층에 비해 투표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변수의 추정계수는 모두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산비(odds ratio)를 계산하면, 저소득층은 중산층에 비해 투표할 확률이 약 15% 낮고, 고소득층은 약 20%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모델 (2)는 중위소득 이하 집단과 이상 집단을 구분하고 중위소득 이하 집단 더미변수를 분석모형에 포함한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중위소득 이하 집단은 중위소득 이상 집단에 비해 투표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결과는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중위소득 이하 집단은 약 20% 정도 투표할 확률이 중위소득 이상 집단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분석 결과는 뚜렷하게 2003-2014년 기간 동안 투표참여의 소득 격차를 보여주는 것이다.

〈표 1〉 소득과 투표참여 2003-2014

변수	[1]	[2]
저소득층	-0.167*** (0.065)	
고소득층	0.181*** (0.051)	
중위소득 이하		-0.220*** (0.045)
연령	0.058*** (0.002)	0.057*** (0.002)
성별 (남성=1)	0.224*** (0.044)	0.227*** (0.044)
교육수준	0.191*** (0.020)	0.192*** (0.020)
경제활동 (경제활동=1)	-0.138*** (0.047)	-0.132*** (0.047)
노동조합원	0.288*** (0.080)	0.286*** (0.081)
정치적 이념	-0.080*** (0.022)	-0.079*** (0.022)
무당파층	-0.888*** (0.044)	-0.889*** (0.044)
상수	-0.394** (0.175)	-0.243 (0.182)
연도 고정효과	Yes	Yes
N	13,398	13,398
Log likelihood	-7,033.46	-7,032.50
Akaike Information Criterion	14,108.93	14,105.00

주: 로짓 추정계수와 표준오차. 연도 고정효과는 지면의 제약으로 보고하지 않음.

\* p<0.10, \*\* p<0.05, \*\*\* p<0.01

많은 연구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령이 한 살 많을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약 5%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투표할 확률이 약 25%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수준이 0-7 척도에서 한 단계 높아질수록 투표할 확률이 약 21%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특정 선거 시기 횡단면 자료를 사용한 연구에서 고학력자가 더 많이 기권했다는 분석결과(서현진 2009)와는 다른 것이다. 2003-2014년 통시적으로 분석했을 때, 한국 선거에서 고학력층이 더 많이 투표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점은 고학력층일수록 투표참여에 대한 시민의식이 더 높기 때문이라 볼 수도 있지만, 일종의 자기선택 메커니즘이 작동하여서 어떤 특성을 갖는 사람들이 학업을 계속하여 고학력층이 되고 동시에 그 특성의 결과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자기선택 메커니즘에 대한 경험적 검증은 더 정치한 연구디자인과 패널

데이터 분석을 필요로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한국 선거에서 학력과 투표참여의 양(+)의 상관관계를 지적하는 것으로 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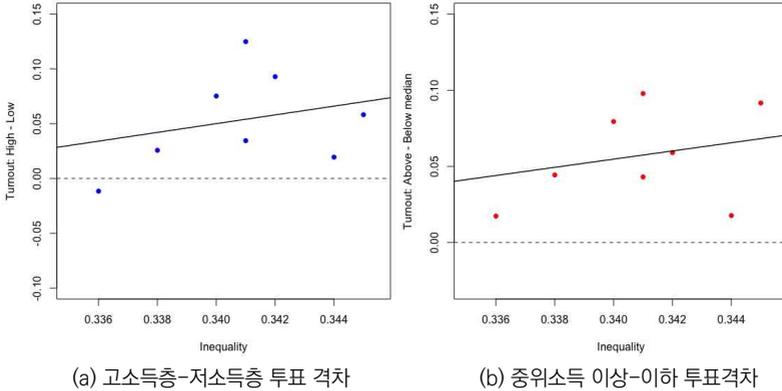
분석결과에 따르면, 놀랍게도 현재 수입이 있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예컨대, 은퇴, 학생, 구직자, 실업자, 전업주부 등)에 비해 투표할 확률이 약 1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다른 연구들과 차이가 나는 것인데,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실업자에 비해 투표참여에 적극적이라는 연구들에서 준거범주는 실업자인 반면에, 이 분석의 준거범주가 매우 이질적인 다양한 집단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노동조합원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투표할 확률이 33%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적으로 보수적일수록 투표할 확률이 7%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소득과 연령, 그리고 이념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결과일 수도 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일수록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에 비해 투표할 확률이 무려 6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거나, 정치현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어느 정당에 대한 지지도 철회하게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유로 기권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표 1〉에 보고한 분석 결과는 19-65세 까지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강건성 검증(robustness test)을 위해 65세 이상 응답자도 포함하여 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분석결과와 질적으로 동일하였다. 저소득층 변수의 로짓 추정계수는 -0.238, 고소득층 변수의 추정계수는 0.182로 나타났고, 두 계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한 가지 차이는 경제활동 변수가 65세 이상을 포함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 2. 소득불평등과 투표참여의 소득격차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서 투표참여를 덜 한다는 발견은 소득불평등 수준에 따라 다른 패턴을 보이는가? 객관적인 소득분포의 불평등 정도와 투표참여의 소득 격차는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가? 이 절에서는 탐색적 수준에서 소득불평등과 투표의 소득 격차의 관계를 살펴본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니계수는 2006년 이후부터 입수 가능하다. 따라서 이 절의 분석은 2006-2014년의 9개 자료만으로 소득불평등과 투표참여의 소득 격차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 제약이 있다. 물론 서베이 자료에서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응답자의 인지와 태도를 묻는 문항들이 있으나, 주관적인 소득불평등 인식보다는 객관적인 소득불평등 수준과 투표참여의 소득격차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탐색적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산점도(scatterplot)를 통해 고찰한다.

〈그림 4〉 소득불평등과 투표참여의 소득 격차



〈그림 4〉는 통계청 자료인 세전 가구소득 지니계수로 측정된 소득불평등과 투표의 소득격차의 관계를 보여준다. 패널 (a)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투표격차를 보여주고, 패널 (b)는 중위소득 이상 집단과 중위소득 이하 집단의 투표참여 격차를 보여준다. 두 패널 모두 소득불평등과 투표의 소득 격차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을 제시한다. 즉, 2006-2014년 시기 한국 사회의 소득분포가 불평등할수록 투표 참여의 소득격차도 더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 소득불평등과 투표참여의 소득격차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한 것은 아니지만, 〈그림 4〉에 제시된 패턴은 상대적 권력 이론의 주장에 조응하는 경험적 증거라 할 수 있다. 즉, 소득불평등이 높은 맥락에서 고소득층의 정치적 자원이 더 파급효과를 갖게 되고, 고소득층의 투표참여는 최소한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에, 저소득층의 투표참여는 더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그 효과는 투표참여의 소득격차의 확대가 된다. 그리고 소득불평등과 투표의 소득 격차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게 된다.

## V. 결론

이 논문은 2003-2014년 〈한국종합사회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 선거에서 투표참여의 소득 격차가 발견되는지, 그리고 소득불평등과 투표의 소득 격차가 어떠한 패턴을 보이는지를 통시적 시각에서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2003-2014년 통합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투표 참여의 소득 격차가 무

렷하게 발견되었다. 중산층에 비해 저소득층은 투표할 확률이 낮고, 고소득층은 투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 응답자들 중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이하 집단과 중위소득 이상 집단을 구분하여 추정된 모형에서도 중위소득 이하 집단이 중위소득 이상 집단에 비해 투표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가지 다른 측정을 사용하였을 때 모두 소득이 낮을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탐색적 자료 분석을 한 결과, 소득불평등과 투표참여의 소득 격차가 양(+)<sup>1</sup>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소득분포가 불평등할 때 투표참여의 소득 격차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갈등이론보다는 상대적 권력이론에 조응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즉, 소득불평등이 높을수록 더 많은 정치적 자원을 갖는 고소득층의 목소리가 더 활성화되고, 적은 정치적 자원을 가진 저소득층은 정치과정에서 소외되거나 스스로 기권하는 현상이 발견되는 것이다.

기존 한국 선거연구에서 소득과 투표참여의 관계에 관한 논의들이 특정 선거와 관련된 횡단면 연구설계에 바탕했던 반면에, 이 연구는 2003-2014년 한국 사회에서 나타난 소득과 투표참여의 관계를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새로운 학문적 기여를 제시한다. 통시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투표율이 낮을 때 투표참여의 소득 격차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낮은 투표율은 저소득층 중에서 기권자가 고소득층 기권자에 비해 더 많다는 점을 암시한다. 따라서 투표의 소득 격차는 더 증가하게 된다. 또한 소득불평등의 정도가 높을 때 투표의 소득 격차가 높아진다는 점도 소득불평등의 증가가 저소득층의 정치소외 및 정치과정으로부터의 기권을 유도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불평등한 정치참여가 소득불평등이 높을수록 더 심화되는 것이다.

20여 년 전 Lijphart(1997)는 “민주주의의 해결되지 않은 딜레마”(democracy’s unresolved dilemma)로 정치참여의 불평등을 지적한 바 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정치참여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투표장에서 고소득층이 과다대표(overrepresentation) 되는 현상을 가리킨 것이다. 정치적 평등의 원리에 바탕한 민주주의에서 소득에 따른 특정 계층이 과다대표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 그리고, 이후 많은 연구들을 통해 투표장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과정과 그 산출물인 정책에서 고소득층의 요구와 이익이 훨씬 더 대표된다는 점이 밝혀졌다(Bartels 2008; Gilens 2012). 이러한 정치적 불평등의 한 단면이 한국 선거에서의 투표참여의 소득 격차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이 연구에서 보여주었다. 소득불평등과 정치참여의 불평등이 맞물려서 전개된다는 점도 제시하였다. 한국 사회의 정치적 대표(representation)의 불평등 현상에 대한 이슈가 좋은 연구주제가 될 것으로 본다. 한국 사회에서 어느 집단의 이익과 요구가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많이, 더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대표되는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 ▣ 참고문헌

- 강원택. 2010. 《한국 선거정치의 변화와 지속》. 파주: 나남.
- 김욱. 2006. “선거의 유형과 투표참여.” 《한국정치연구》, 15(1): 99-121.
- 김성연. 2015. “한국 선거에서 투표 참여집단과 불참집단의 정책 선호와 사회경제적 배경: 2012년 양대 선거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22(4): 41-68.
- 김지범·강정한·김석호·김창환·박원호·이윤석·최슬기·김솔이. 2017. 《한국종합사회조사 2003-2016》.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서복경. 2010. “투표 불참 유권자집단과 한국 정당체계.” 《현대정치연구》, 3(1): 109-129.
- 서현진. 2009. “투표참여와 학력 수준.” 김민전·이내영 공역,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3》, 131-158,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윤성호·주만수. 2010. “투표참여의 경제학: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결정요인 분석.” 《경제학연구》, 58(2): 221-254.
- 이갑윤. 2008. “한국선거에서의 연령과 투표참여.” 《의정연구》, 26: 93-116.
- 이현경·권혁용. 2016. “한국의 불평등과 정치선호의 계층화.” 《한국정치학회보》, 50(5): 89-108.
- 조성대. 2006. “투표참여와 기권의 정치학: 합리적 선택이론의 수리모형과 17대 총선.” 《한국정치학회보》, 40(2): 51-74.
- 한정훈·강현구. 2009.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과 정치엘리트의 전략적 행위가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사례분석.” 《한국정치연구》, 18(1): 51-82.
- 황아란. 2008. “선거환경변화가 당선경쟁과 투표율에 미친 영향.” 《한국정당학회보》, 7(2): 83-109.
- Aldrich, John. 1993. “Rational Choice and Turnou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7(1): 246-278.
- Anderson, Christopher J., & Pablo Beramendi. 2008. “Income, Inequality, and Electoral Participation.” In Pablo Beramendi & Christopher J. Anderson (eds.), *Democracy, Inequality, and Representation* (pp.278-321),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Bartels, Larry M. 2008. *Unequal Democrac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eramendi, Pablo, & Christopher J. Anderson (eds.). 2008. *Democracy, Inequality, and Representatio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Bonica, Adam, Nolan McCarty, Keith T. Poole, & Howard Rosenthal. 2013. "Why Hasn't Democracy Slowed Rising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7(3): 103-124.
- Brady, Henry. 2004. "An Analytical Perspective on Participatory Inequality and Income Inequality." In Kathryn M Neckerman (ed.), *Social Inequality* (pp.667-702),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Brady, Henry, Sidney Verba, & Kay Schlozman. 1995. "Beyond SES: A Resource Model of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2): 271-294.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 Low.
- Enelow, James, & Melvin Hinich. 1984. *The Spatial Theory of Voting: An Introd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anklin, Mark N. 2004. *Voter Turnout and the Dynamics of Electoral Competition in Established Democracies since 194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eeman, Richard. 2004. "What, Me Vote?" In Kathryn M Neckerman (ed.), *Social Inequality* (pp.703-728),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Gilens, Martin. 2012. *Affluence and Influence: Economic Inequality and Political Power in America*.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and Russell Sage Foundation.
- Goodin, Robert, & John Dryzek. 1980. "Rational Participation: The Politics of Relative Power."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0(3): 273-292.
- Huber, Evelyne, & John D. Stephens. 2012. *Democracy and the Left: Social Policy and Inequality in Latin America*.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am, Cindy D., & Carl L. Palmer. 2008. "Reconsidering the Effects of Education on Political Participation." *Journal of Politics*, 70(3): 612-631.
- Kenworthy, Lane, & Jonas Pontusson. 2005. "Rising Inequality and the Politics of Redistribution in Affluent Countries." *Perspectives on Politics*, 3(3): 449-471.

- Leighley, Jan E., & Jonathan Nagler. 2014. *Who Votes Now? Demographics, Issues, Inequality, and Turnout in the United Stat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ijphart, Arend. 1997. "Unequal Participation: Democracy's Unresolved Dilemm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1): 1-14.
- Mayer, Alex. 2011. "Does Education Increase Participation?" *Journal of Politics*, 73(3): 633-645.
- Mueller, Dennis C. 2003. *Public Choice II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dcliff, Benjamin. 1992. "The Welfare State, Turnout, and the Economy: A Comparative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2): 444-456.
- Solt, Frederick. 2010. "Does Economic Inequality Depress Electoral Participation? Testing the Schattschneider Hypothesis." *Political Behavior*, 32(2): 285-301.
- Verba, Sidney, Kay L. Schlozman, & Henry Brady. 1995.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ttenberg, Martin. 2002. *Where Have All the Voters Gon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Wolfinger, Raymond, & Steven Rosenstone. 1980. *Who Vot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부록〉

〈표 A.1〉 기술통계

변수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투표참여	0.718	1	0.45	0	1
소득	8.253	7	4.806	0	21
저소득층	0.133	0	0.34	0	1
중산층	0.601	1	0.49	0	1
고소득층	0.266	0	0.442	0	1
중위소득 이하	0.531	1	0.499	0	1
중위소득 이상	0.469	0	0.499	0	1
연령	40.829	40	11.789	19	65
성별	0.475	0	0.499	0	1
교육수준	3.785	4	1.349	0	7
경제활동	0.649	1	0.477	0	1
노동조합원	0.084	0	0.277	0	1
정치적 이념	2.997	3	0.97	1	5
무당파층	0.337	0	0.473	0	1

〈표 A.2〉 상관관계

	연령	남성	고용	교육	노조원	소득	이념	무당파	투표	저소득	고소득
남성	0.002										
고용	0.092	0.297									
교육	-0.473	0.139	0.048								
노조원	-0.029	0.108	0.222	0.056							
소득	-0.071	0.032	0.162	0.377	0.074						
이념	0.101	-0.041	-0.017	-0.099	-0.018	-0.027					
무당파	-0.069	-0.01	0.023	0.035	-0.022	-0.013	0.005				
투표	0.211	0.055	0.02	-0.012	0.034	0.053	-0.017	-0.168			
저소득	0.19	-0.036	-0.163	-0.3	-0.07	-0.495	0.022	0.008	-0.002		
고소득	-0.02	0.021	0.105	0.288	0.059	0.81	-0.034	-0.018	0.05	-0.236	
중산층	-0.114	0.007	0.018	-0.052	-0.004	-0.388	0.016	0.01	-0.043	-0.48	-0.739

〈표 A.3〉 분석에 사용한 설문 문항

\* 투표참여=1, 기권=0, “귀하는 지난 \_\_\_ 선거에서 투표하셨습니까?”

- 2003 조사 - 2002년 대통령 선거
- 2004 조사 - 2004년 국회의원 선거
- 2005 조사 - 2004년 국회의원 선거
- 2006 조사 - 2006년 지방선거
- 2007 조사 - 2006년 지방선거
- 2008 조사 - 2007년 대통령 선거 (분석에 사용) / 2008년 국회의원 선거
- 2009 조사 - 2008년 국회의원 선거
- 2010 조사 - 2007년 대통령 선거 (분석에 사용) / 2010년 지방선거
- 2011 조사 - 2010년 지방선거
- 2012 조사 - 2012년 국회의원 선거
- 2013 조사 - 2012년 대통령 선거
- 2014 조사 - 2014년 지방선거

\* 소득

“귀택의 월평균 총소득은 세금공제 이전에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귀하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들의 수입을 근로소득, 이자, 재산 및 임대소득과 연금, 각종 보조금 혹은 누군가로부터 개인적으로 받는 돈 등을 모두 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0-21 구간 척도)

- 저소득층: 0-3 구간 (소득없음-149만원)
- 중산층: 4-10 구간 (150만원-499만원)
- 고소득층: 11-21 구간 (500만원-1000만원 이상)
- 중위소득 이하 집단: 0-7 구간 (소득없음-349만원)
- 중위소득 이상 집단: 8-21 구간 (350만원-1000만원 이상)

\* 성별: 응답자의 성별. 남성 1 / 여성 0

\* 연령: 응답자의 실제 연령.

\* 교육수준: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0 무학 1 초등(국민)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전문대학(2, 3년제) 5 대학교(4년제) 6 대학원(석사과정) 7 대학원(박사과정)

\* 경제활동: “지금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취업 1 / 미취업 0

\* 노동조합원: “귀하는 현재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습니까?” 그렇다 1 / 아니다 0.

\* 정치적 이념: “귀하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진보적 또는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진보적 2 다소 진보적 3 중도 4 다소 보수적 5 매우 보수적

\* 무당파층: “귀하는 현재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지지정당 없음 1 / 지지정당 있다고 응답한 경우 0

## Income and Inequality in Voting: The Case of South Korea, 2003–2014

Hyeok Yong Kwon & Seobin Han

This paper examines if there is income bias in electoral participation in Korean elections by analyzing the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2003–2014, and explores how income inequality and income bias in voting have co-evolved. Results of our analysis suggest the following findings. First, we found significant income bias in voting in Korean elections. Low-income people vote much less than middle-income people, while high-income people vote more than middle-income people. Second, we found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income bias in voting. Findings correspond more to the relative power theory rather than the conflict theory. As inequality increases, the voice of the high-income group grows more vocal and opinionated, whereas that of low-income group grows alienated from political processes. Findings reveal remarkable overrepresentation of rich voters and unfortunate underrepresentation of poor voters in the political process in South Korea.

※ Keywords: : Elections, Vote Participation, Voter Turnout, Income, Inequality, Korean politics